

DMZ 北 지뢰 매설… 여야, ‘누가 막았어야 했나’ 책임 공방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추가 발견
여야, 북한 정전협정 위반 규탄
책임 소재·정부 대응 놓고 정면 충돌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군사 분계선(MDL) 남쪽에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여당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들어 대북 안보 공백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를 폐기해야 비로소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9일 실시한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최소 4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때문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유실’ 가능성을 언급하던 더불어민주당도 강도 높은 대북 규탄 발언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 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다”며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측의 ‘국경선 요새화’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4월부터 포착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방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도발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냐고 하는데, 2024년 4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나”라며 “지형 변화 흔적이

나온 후부터 합참, 한미가 연합으로 계속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현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조사에 들어갈지 긴밀하게 협의해왔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에 따른 현장 조사 지연, 외압에 따른 조작·은폐 의혹 제기는 근거가 전혀 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고의성’을 갖고 지뢰를 매립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지뢰 매설 자체는 명백한 정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등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협정 위반이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이 찢기리 종전 협상을 구걸할 때 북한은 지뢰 매설을 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정전협정도 어기는 북한과 어떻게 종전을 논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협정 위반을 전면 부

인하며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했다”며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이다. 북한 앞에 조아린 고개를 들고 제발 참혹한 안보 현실을 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허접한 음모론 프레임을 그만두고 대북 초저자세가 초래한 참극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중진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재개와 김정은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유엔 연설 발언을 공식 취소하고, 지뢰 폭발로 평생의 상처를 안은 전상장병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며 “‘상응하는 조치’라는 말뿐인 립서비스로는 안된다.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할 김정은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가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맡길 최고 수위의 국제 금융 제재와 해외 은닉 자산 추적 및 압류,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박경수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우리 손으로 만든 이지스함”

국산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
자주국방·방위산업 육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하는 자리에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 축사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된 6척의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으로,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다. 진수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정부와 군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외교사절단,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및 방위산업체 관계자, 울산 지역 학생, 대한민국 명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9년 전, 바로 이곳 울산 미포만에서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함차게 바다로 나섰다”며 “이 연단에 서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저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킬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이지스함을 만들기 결정한 것이 24년 전”이라며 “그 첫 배가 세종대왕함이었고, 대호김종서함이 오늘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띄우는 이 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은 우리가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라며 “빌려 쓰던 시절이 있었고 사다 쓰던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또 국산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엔 조선산업의 위상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만 해도, 이곳 울산 미포에 모래밭, 비뚤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모래사장에서 시작한 우리 조선업이 이제는 그 어렵다는 LNG 운반선부터 세계가 부러워하는 해군 이지스함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다. 우수한 품질, 정확한 납기, 확실한 후속지원을 갖춘 우리 조선소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찾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다”며 “조선산업을 국가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초격차 국가 핵심 산업인 방위산업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호김종서함은 겉으로 보면 한 척의 배일 뿐이지만, 안에는 수백킬로 배를 탐지하는 레이더, 수백개의 표적을 분석하는 무기체계, 그리고 이 모두를 묶어내는 소프트웨어로 가득하다”면서 “단순히 배를 짓는 기술만으로 이런 최첨단 함정을 만들 수 없다. 우리 방위산업 역량이 이 안을 하나하나 채워왔기 때문에 이 배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곧바로 전력화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우리의 방산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수출과 해외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AI 발전 길 터야… 당이 정책 지원”

국민의힘 ‘AI 친화 정당’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인공지능(AI) 정책과 관련해 “기업도 국민도 모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치가 마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앞장서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굿모닝 주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AI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국민 삶과 나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글로벌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고 발전시킬 부분들을 발전

시키고 길을 터야 할 부분들은 터야 할 것”이라며 AI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위원장인 조승환 의원은 “우리당은 AI프렌들리(친화적인) 정당”이라며 “AI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동시에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규제만 할 수도 없고 AI가 불러올 인류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AI시대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서 있는지 좌표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그 위에서 AI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 수요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양향자 최고위원, 박준태·이인선·최보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국정원 “김여정 담화, 北 연관성 차단 의도”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브리핑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부장의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입장에 대해 절제하는 기조로 북한관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영하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언론 브리핑에서 “담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핑장히 로키(low-key·절제 기조)로 담화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정보위 여당 간사는 “담화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무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다”며 “아울러, 기존 담화의 주제가 군부였는데, 김 총무부장이 내는 등 몇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여정 총무부장은 전날(29일)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통해 이번 DMZ 지뢰폭발 사고가 10여년전 ‘북한지뢰 사건’과 비슷하다며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